

### 전북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2025년 주요업무계획

#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환경 조성 목표

#### ‘함께하는 자치경찰, 안전한 전북자치도’ 비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연주)는 12일 오전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원회의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연주 위원장은 2025년에는 ‘함께하는 자치경찰,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비전으로 정하고, 도민이 행복하고 안심할 수 있는 치안 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역과 함께 참여 협력하는 공동체 안전망 운영 △도민이 체감하는 선제적 예방 보호 등 3대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9개 실행 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역과 함께 참여 협력하는 공동체 안전망 운영

이 위원장은 “지역협의체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정책자문협의회’를 재구성하고, 전북테크노파크 등 IT·치안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 치안 자문단’을 운영해 과학 치안을 활용한 치안 시책을 발굴하는 등 지역협의체를 내실화하여 다자간 밀도 있는 협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민 참여 및 시군 협력을 위해 전북민의 특화된 치안 문제와 생활 밀착형 치안 시책을 발굴하고, 전주시를 포함한 6개 시·군과 소통 간담회를 추진하여 자치경찰제 시행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협력 체계를 우수하게 구축한 시군 3곳을 선정해 각 2,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도내 전체로 확산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 협력 단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난 대응과 실종자 수색 등 도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87개 지대, 6,417명의 자율방범대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노후 초소 16개소의 시설을 개선하고 ‘자율 방범 순찰 지원 앱’을 확대 보급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라고 하며, “더불어 매 분기 ‘베스트 자율방범대’를 선정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공동체 치안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했다.

#### △도민이 체감하는 선제적 예방 보호 활동 추진

이 위원장은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민의 치안 수요를 반영해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을 실시한다.”며, “이를 통해 안심 산책로·등산로를 조성하고, 구도심 및 골목길을 정비하는 등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오는 3월 공모를 통해 3개 시·군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2025년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여 한국국도정보공사(LX) 플랫폼을 활용해 외국인 대상 치안 인식 설문조사와 전북대학교 인근 범죄 데이터를 분석해,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과 범 준수 인식을 높이는 안전 모델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특별히 사회적 약자인 아동·여성·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며, “아동안전지킴이 745명을 통학로에 배치하고 아동안전지킴이집 743개소를 활용해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실종 예방을 위해 지문 사전등록 사업을 지속 운영해 아동 실종을 사전에



이연주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장이 12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체 안전망 운영·선제적 예방 보호 등

#### 3대 추진 전략·9개 실행과제 추진키로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청소년 경찰학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학교전담경찰관 63명을 배치해 위기 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집중한다.”고 했다.

그리고, “스토킨과 교제 폭력 등 보복 범죄 위험이 높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 초인종 등 안심 장비를 지원하여 강력 범죄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노인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단속 장비와 무단횡단 방지 시

설, 횡단보도 조명을 설치해 사고를 예방하고,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와 협력하여 교통안전 문자 알림 서비스 및 인지능력 검사를 시행해 노인 교통 안전을 강화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부터 전주 선화학교와 송천초등학교에서 시행된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 운영’을 올해에는 8개 시·군 17개소로 확대해 도심 내 상습 정체 구간에서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보급 확산에 맞춰 거처 설치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치경찰제 미래 발전을 위한 치안 행정 강화

이 위원장은 “자치 경찰권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제 시행 5년 차인 시점에서, 전국 자치경찰위원회와 공조하여 4개 특별자치시(전북·강원·세종·제주)에서 이원화가 시범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제2 중앙경찰학교 유치전에서 남원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남원시, 유관 단체·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다.

제2 중앙경찰학교 부지 유치는 아산시와 결합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올해 하반기로 미루어진다.

이 위원장은 “자치경찰 인지도 제고를 위한 주민 친화적인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올해는 버스정보시스템(BIS), 블로그 기자단, 아파트 미디어보드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주민 참여형 홍보를 확대하고, SNS 등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젊은 층 대상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단 112명을 위촉해 도민의 목소리를 치안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등 선도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다.

이연주 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와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 “전력망 구축 사업계획 주체는 정부가 맡아야”

민주 안호영 의원, 국가 전력망특별법안 평가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전력망특별법안 평가 토론회를 전북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전원과 에너지전환포럼, 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공동주최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안호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력망구축은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제2의 밀양송전탑 사태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망 기본계획 설계 단계부터 주민참여 확대, 보상 및 지원 체계 개선, 투명한 정보 공개와 협의 절차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비탄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송전탑 건설 추가 없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대안책으로 자산지소, 즉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수도권에 과잉입되어 지역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안 의원은 “전력망 특별법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된 이후라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보완점을 마련해 나가고 자산지소형 에너지 시스템 마련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주=전문성 기자

## 경제위기 대응 제도적 장치 마련

이병도 도의원, 전북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 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가 12일 제416회 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이 의원은 “전북경제는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전산업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도민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위기를 사전에 감지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경제는 코로나19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도민들의 깊은 한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 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위기상황을 진단하는 시스템이 부재했다”며, “이번 조례를 근거로 전북 경제의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경기 침체에 따른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기경보시스템 등 전북 경제위기에 따른 단계별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정책 수립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경제위기대응위원회 구성 △경제위기대책본부 구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사태 도내 피해액 279억 추정”

윤정훈 도의원, “정부 정책 믿고 계약 진행한 청년농은 좌절 현 정부 행정에 피해 입은 청년농업인들에 도 차원 지원을”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사태로 인한 도내 청년농업인의 피해규모가 279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 정책만 믿고 기반 없는 농촌에 내려와 농업에 진출을 결심했던 청년들이 고통받고 좌절하고 있다”며,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사태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의 각별한 관심과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 육성 목표를 세웠다. 육성방안으로 영농정착지원금, 창



업자금 융자(이하 정책자금), 교육 및 컨설팅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정책자금을 최대 5억 원을 연 1.5% 수준의 저리로 대출이 가능해 영농기반이 없는 청년들이 농촌에서 새로운 도전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2025년 정책자금 배정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신청자의 75%가 대가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청년 농업인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윤 의원은 따르면 전북에서도 610

명이 정책자금을 신청했지만, 단 175명만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정책자금 대출을 받고 토지 매매나 시설투자 계약체결을 진행했던 청년농업인 다수는 정책자금 배정에 탈락하면서 계약금 손실과 영농계획 차질 등 피해가 발생했다.

윤정훈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파악한 정책자금 탈락 청년농업인의 피해 규모만 279억, 99명에 이른다”면서 “이는 2024년 농지구매나 시설 투자 계약일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개별농가가 받고 있는 피해는 이보다 더 클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사는 시기가 중요하다. 때를 놓치면 한 해 농사를 망친다”면서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에 피해입은 도내 청년농업인에 대해 전북자치도가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

## 전북선관위, 제22대 총선 선거범죄 포상금 지급

정치자금법 위반 신고 제보자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등 위반행위 신고 제보자에게 포상금 9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회계책임자의 위임없이 선거비용을 지출하거나,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출하는 등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다. 이로써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전북도내에서 지급된 포상금은 총 3건, 3,710만원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 지

출과 관련하여 과거와 비교해 위법사례가 감소하는 하였으나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내부의 신고·제보가 꼭 필요하다”면서, “이번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신고·제보가 더욱 활성화되어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그동안 금품제공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여 선관위에 우려를 표명하는 만큼 금품수수 및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관심과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보호와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새만금 국제공항 규모 확대·연계교통망 구축해야”

김대중 도의원, 정부 상대로 공식 건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 1)이 새만금국제공항의 규모 확대가 시급하다고 정부를 상대로 공식 건의했다.

김대중 의원은 “새만금 기본계획상 최종목표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새만금을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국제적인 규모의 경제도시를 목표로 하면서도 개발 성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 도시의 규모를 결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계획규모는 국내 지방소도시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정한 것”이라며 새만금의 개발성과를 증대시키기 위



해서는 새만금국제공항의 규모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상, 활주로는 2,500미터, 항공기들의 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계류장의 규모는 5대에 불과하다. 현재 미군에 빌려 쓰고 있는 군산공항의 활주로가 2,745미터로 신설되는 새만금국제공항의 활주로가 더 짧다. 김 의원은 “현재 규모로는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를 키워 국내에서조차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해 지자체 보조금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여는 지방공항 중 하나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대규모 항공물류와 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해야만 새만금과 전북에서 국제공항의 설치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 기본계획상 빠져 있는 공항 연계교통망계획도 즉각 포함시켜야만 공항 이용편의 증진과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공항 건설과 함께 연계교통망을 건설해야만 개항 때부터 바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민주 이춘석 의원, 대정부질문서 국힘 향해 ‘정당 해산’ 경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내란동조 정당으로 해산되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선을 넘지말라”며, “국민의힘이 서 있는 그곳이 이미 레드라인”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12일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이춘석 의원은 피소추인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보여준 일련의 행태들을 나열하며 “앞으로 선고를 할 헌법재판소 판결에 불복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춘석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앞다퉂 구치소에 있는 대통령을 알현하고 이제는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까지 공격하고 있다”라며, “정권을 잡기 위해 국가 근간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흔드는 국민의힘을 국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존중한다는 전제하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라며, “국민의힘이 진정 헌법에 맞는 정당이라면 윤석열을 끌어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춘석 의원은 검찰이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2번의 영장청구를 반려한 점, 검찰의 고위간부가 김용현 전 장관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 등을 포집으로 검찰 수사를 향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명태군 수사보고서에 상세한 내용이 담겨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건회에 대해 소환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며,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만큼 명태군 게이트에 대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만호 기자